

Vol. 52

2020년 5월  
해양환경

#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

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, 해사법률, 해사정책, 해사안전,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([www.kmi.re.kr](http://www.kmi.re.kr))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- 총 괄 박한선 실장
- 감 수 윤희성 본부장
- 발행인 장영태 원장
- 발행처 해운·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
-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 
301번길 26(동삼동)
- T E L . 051-797-4800
- F A X . 051-797-4810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 
KOREA MARITIME INSTITUTE

##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IMO-FAO 파트너십 체결

### IMO와 FAO(유엔 식량농업기구)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GloLitter 파트너십 공동 이행 합의<sup>a)</sup>

- ▶ IMO와 FAO는 2019년 5월 해운 및 어업이 저 플라스틱(low plastic)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돕고자 GloLitter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, 2020년 4월 공동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을 완료함
    - GloLitter는 해상운송 및 어업 분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한 해양쓰레기를 줄이고, 플라스틱을 재사용 및 재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며, 산업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
    - 항만 수용시설의 적절성을 고려하고, 선원 및 어업인의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, 어구 내 별도 표기를 통해 폐기 시 소유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함
    - GloLitter는 다자기금 프로그램(multi-donor programme)이며, 노르웨이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위한 초기자금 4천만 크로네(약 450만 달러)를 지원함
  - ▶ 우선 순위가 높은 5개 지역(아시아, 아프리카, 카브리해, 중남미, 태평양)의 10개국<sup>b)</sup>이 선정되어 프로젝트를 주도 하게 됨
    - GloLitter 프로젝트는 이전의 "Glo-X" 모델처럼 법적, 정책적, 제도적 개혁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됨. 국가차원에서는 정부와 항만의 관리 역량을 확대시키고, 법-정책적 제도를 개혁하며, 지역의 협력을 강화 시킬 것임
    - IMO, UNDP(유엔개발계획), GEF(지구환경기구)에서 개척한 "Glo-X" 모델로는 Globallast(Global Ballast Water Management Project), GloMEEP(Global Maritime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s Project), GloFouling(Global Biofouling Project) 프로젝트가 있음<sup>b)</sup>
    - GloLitter 프로젝트도 위 Glo-X 모델처럼 유사한 협력 및 협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
  - ▶ GloLitter 프로젝트는 IMO 제30회 총회에서 언급된 것처럼 IMO 신규전략 방향과 밀접한 관련 있음
    - IMO 제30회 총회에서 선박 기인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는 IMO 신규전략(SD1\*, SD4\*\*) 방향 및 UN SDG14\*\*\*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해사기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제언함
- \* UN, Strategy Development(SD, 전략개발) 1: Improvement implementation(이행개선)
- \*\* UN, Strategy Development(SD, 전략개발) 4: Engage in ocean governance(해양거버넌스 참여)
- \*\*\* IMO, Sustainable Development Goal(SDG, 지속가능한발전목표) 14 : 수자원 보호

- SDG 14는 '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 보존 및 이용'에 관한 내용임. GloLitter를 통해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, 부영양화(nutrient pollution) 및 육상기반활동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을 예방하고, 현저하게 감소시킨다(prevent and significantly reduce marine pollution of all kinds, in particular from land-based activities, including marine debris and nutrient pollution, by 2025)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임

## ■ 정부,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<sup>c)</sup>

- ▶ 우리 정부도 2019년 6월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 줄이기를 설정함
  - 해양 플라스틱의 전(全) 주기(발생·수거·처리 등) 관리방안을 담은 「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」을 마련함
  - 4대 분야(발생원별 저감 및 예방체계 구축, 해양 플라스틱 수거·운반체계 개선, 해양 플라스틱 처리·재활용 촉진,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)의 12개 추진과제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을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30%, 2030년까지 50%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
  - '발생원별 저감 및 예방체계 구축'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을 해양, 육상유입, 해외유입으로 나뉘었으며,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책을 세움.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%를 차지하는 폐어구·폐부표 회수를 촉진하고자 폐어구와 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'어구·부표 보증금제도'를 2021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임

〈그림 1〉 해양 플라스틱 줄이기 종합대책



자료 : <http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861331> (2020.05.06. 검색)

-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, IMO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의 단계별 조치계획[Res.MEPC.308(73)] 수준으로 논의되어야 함
  -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폐어구, 폐부표, 육상에서 유입된 쓰레기로 한정되어 있어, 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의 단계별 조치계획 보다 협의의 개념임
  - IMO의 조치계획은 우리나라 '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'에서 다루지 않는 선박 기인 플라스틱 쓰레기 (유실 컨테이너 등)까지 다루는 등 광의의 범위를 다룸
  - 우리나라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정책도 폐어구, 폐어선, 육상 유입에 한정 짓지 않고, IMO 연구과제 수준에 맞추는 것 필요함
    - 1) 선박 기인 플라스틱 쓰레기 재사용 및 재활용, 독립된 플라스틱 쓰레기 보관소를 통한 처리 기술
    - 2) 항만 내 폐기물 수용을 위한 적절한 시설 확보
    - 3) 플라스틱 쓰레기 회수 및 수거 관련 지역적 국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연구
    - 4)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를 위한 모범적인 항만 폐기물 관리에 관한 검토
    - 5) 어업 활동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, 종류 파악
    - 6) 항만 폐기물 수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등

## 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 맞는 국내 제도 정비 필요함<sup>d)</sup>

- 국회 계류 중이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(이하 해양폐기물 관리법)이 2019년 12월 제정되었고, 2020년 12월 시행 예정임
  - 제정된 해양폐기물 관리법은 기존의 해양환경관리법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 기존의 해양환경관리법은 체계적인 관리체계 부재 및 개별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 등의 한계점을 지적받아 왔으며,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폐기물 관리로는 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음
  - 해양폐기물 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,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·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
- 실질적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관리하기 위해 국회 계류 중이던 해양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된 것은 희망적이나 여전히 아쉬움 존재
  - 환경부는 2019년 11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% 감축하겠다는 '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'을 발표했으며, 해양수산부도 2019년 5월 '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'에서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50%(2018년 대비) 감축하겠다고 밝혔음
  -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해양쓰레기 처리와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감축·재활용 등의 업무를

해양수산부, 지자체, 환경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음

-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‘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(Save Our Seas)법 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’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다부처 위원회의 필요성을 언급함
- 또한, 동 보고서는 최근 우리 정부가 내 놓고 있는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저감 대책은 저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품목(일회용 배달용기 등)이 다수 포함돼 있어 EU 등의 기준과 비교해 미흡하다고 지적함

정인회 위촉연구원

해운·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 
(inhoe@kmi.re.kr / 051-797-4920)

참고  
자료

- a) <http://www.imo.org/en/MediaCentre/PressBriefings/Pages/32-GloLitter-signing.aspx> (검색일: 2020.05.06.)
- b) <http://www.imo.org/en/MediaCentre/HotTopics/oceans/Pages/default.aspx> (검색일: 2020.05.06.)
- c) <http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861331> (검색일: 2020.05.06.)
- d) <http://www.greenpostkorea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15336> (검색일: 2020.05.06.)